

192석 확보한 범야권, 경제분야 상임위 입법 주도권 잡을 듯

민주당,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 불평등 해소에 정부개입 적극 허용 R&D, 국가예산비 5% 수준 확보 재생에너지 자급률 높여 RE100 실현 가계대출 부담↓·생계비 계좌 도입 거부권 재의결 문턱... 걸림돌 될 듯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함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합의를 지향하지만 이견이 커 법률안 처리가 막힐 경우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이 법안을 본회의로 회부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야당의 주도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시킬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내는 가격 체제에 의해 자원 배분과 생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량을 조절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부양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명시할 정도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데 적극적이며, 이와 관련한 법안의 제·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정당'과 '균형발전'을 이뤘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

서 선도국가도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 집중 지원 등을 공약했다.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식도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 자급률을 높여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실현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대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전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여당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 시대가 종식된 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이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서민들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대출금리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기대했던 대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재의결 문턱인 200석(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쟁점법안은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쌀의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 가격을 부양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추진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의결을 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21대 국회서 '농산물 가격안정법' 통과시킬 것"

국가,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기후위기에 작황 편차 등 이유 꼽아 장기적 재정소요에 與 반대 부딪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가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산물 가격안정법)'을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법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상임위 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재갑, 안호영, 위성곤, 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제각각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을 발의한 뒤 지난 1



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오이가 진열돼 있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이 서울시 16개 전통시장에서도 시행된다.

/뉴스

월 농해수위에서 이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

시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농수산물은 자연 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 폭이 크고 최근 기후위기 현상으로 인해 작황의 편차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가 최근 대과값 논란처럼 특정 농산물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산 농산물을 들여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생산이 과잉될 경우엔 생산원가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이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농어가의 경영 안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상당히 장기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돼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철현 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해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즉 '농수산물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년가격 대비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에 실시된 바 있는 채소가격안정제는 시범사업 연도였던 2016년엔 3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2023년엔 552억원이 책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직회부할 생각이다. 국회법은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상임위 재적 5분의3 이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21대 국회 농해수위 정당별 구성은 총 19명 중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친민주당 성향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비교적 단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원내대변인은 농수산물 가격안정화법에 대해 "물가와의 관계없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이기에 때문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수산물 가격안정화법이 상임위에서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된 것에 대해 지난 1월 15일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대상을 배추·무 등으로 대폭 확대시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날선 비판을 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與, 네 번째 비대위 구성... '수직적 당정·영남당' 탈피 목표

'실무형 비대위'에 의견 모아 오는 6월 전당대회 열릴 전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대위에서는 대통령 실과 여당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하고, '도로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

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거듭되는 지도부 공백에 조속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오는 6월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 예측이 나온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거쳤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준석·김기현 지도부는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집권 2년 동안 총 5명의 수장이

바뀐 셈이다.

윤석열 정부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두 달도 안 돼 당 차원의 징계를 받고 대표직을 상실했다. 이후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으나, 법원이 이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

이후 정진석 비대위가 6개월간 운영됐는데, 지난해 3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전 대

표와 경쟁했던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이 공격 대상이 됐다.

전원계 지원으로 당선된 김기현 전 대표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등으로 취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지만, 임박한 선거와 잦은 지도부 교체에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이 부재했다는 평가다.

여당 내에서는 이번 4·10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이어진 수직적 당정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 측근들이 '내부 총질'로 몰

아갔던 분위기가 당내 분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이번 총선 지역구 당선인의 약 3분의2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 몰린 상황이다.

이번 비대위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내달 초까지 담당하고, 이후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이끄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실무형으로 비대위가 운영되더라도, 혁신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